

## 위원회 합의

# 공공기관위,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보수)체계 개편 노력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작년 11월 공공기관위원회 출범 이후 정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오므로서 노정간 의사소통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제기되어온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함에 있어 노정간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고려한 숙의 과정을 거친 점도 중요하게 평가할 대목이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정은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개편이 노사간 신뢰와 협

### | 위원회 합의 | 01-02

공공기관위,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 및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보수)체계 개편 노력 합의

### | 전문가 기고 | 03

공공기관위원회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 | 위원회 발족① | 04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 | 위원회 발족② | 05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어선원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 추진



### | 위원회 단신 | 06-07

<비정규직위원회>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마련 의제 제안

<지역사회적대화연구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논의, 위원회 설치 건의 검토

### | 에필로그 | 08

2020년 「사회적대화 Brief」를 마감하며

력에 기반하여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노·정은 '21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 다만 2기 출범 일정은 연구회 활동 경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면서, “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노정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slc**

담당 구미현 전문위원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대표와 공익위원들은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참여형 기관 운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한다.

### II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 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 ②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나 능토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

#### □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및 경영투명성

- ① 채용비리, 직장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등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②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III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 □ 공공기관 임금(보수)체계

- ①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①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IV 후속논의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한다.

2020.11.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전문가 기고

# 공공기관위원회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상 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부와 노동조합 대표는 지난 11월 상호 신뢰를 지향하는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합의안은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임금제도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두 가지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속한 세부 과제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의제인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은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먼저 내부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며,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를 통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허가를 한다면 이사회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공정임금 실현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

”

그 다음으로 윤리경영과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채용 공정성,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협력업체 상생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부정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주체들이 협력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관련법이 조속하게 제정되기를 국회

에 건의하였다.

둘째 의제인 지속가능한 임금제도는 임금(보수)체계와 임금피크제를 논의 대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임금(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직무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보수)체계의 개편은, 기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의 내외적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개편 방식은 지양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임금피크 대상 인력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노·정은 공공기관 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합의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2021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하여 연구회 등 의제 설정 과정을 거쳐서 후속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해묵은 쟁점인 노동이사제와 직무급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현재 노·정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수준을 확인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와 실행 노력이 필요하고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예상되지만, 공공부문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공정임금 실현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경로를 가시화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일정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c**

위원회 발족①

# 소상공인위원회 발족

취약계층 소상공인 관련 의제개발·정책제언 기대  
11.26.(목) 발족, 코로나19사태 대응방안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11월 26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출범 후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계층별위원회를 꾸준히 발족시켜 왔다.

취약 근로자 계층별위원회 발족\*에 이어 취약 사용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위원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 중심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던 과거 사회적 대화와는 차별화된 대화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 '20. 8. 4.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별위원회 기 발족

위원회는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본위원회에 의제 논의를 위한 의안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

”

특히 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자영업 구조개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소상공

인 상생경제 구축’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붙임 참조)은 총10명으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소상공인단체 7명과 전국사용자단체 2명을 위촉했다. 또한 위원회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도 초빙했다.

<위원 명단>

위원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위원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김영홍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 회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담당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현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장)

하현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해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가 위기극복 방안 모색은 물론 근본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ic**

담당 김명환 전문위원



위원회 발족②

#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

## 어선원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 논의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6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위원장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어선원 노동자는 해마다 약 140명(최근10년 평균치) 가량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2015년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 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

”



어선원의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을 규율하는 법제도도 정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이에 어선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



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기로 하고, 어선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선원노련(2인), 경영계를 대표하여 수협과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위원 명단>

위원장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노동계	김택훈 (선원노련 수산정책본부장) 박희성 (선원노련 전국해원노동조합위원장)
경영계	김명철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장) 김성호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정부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공익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상우 (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담당	조현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전영우 위원장은 “이들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SLC**

담당 조현민 전문위원



## 위원회 단신

## 비정규직위원회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마련 의제 제안

비정규직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 출범하여 ①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②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정규직 의견 개진, ③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노동권 보장,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 ⑤ 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 ⑥ 간접고용 남용에 대한 규율과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질적 실업부조’,  
‘상병수당·유급병가 및 휴가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우선 위원회에서는 12월 말까지 두 가지 의제에 논의를 집중했다. 첫째, 플랫폼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을 본위원회에 제안한다. 내용 마련을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 및 쟁점’(10.6. 제4차 회의),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사회적 보호방안’(10.19. 제5차 회의),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당사자 단체 간담회’(11.16.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무제공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제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관련 비정규직 의견 개진을 위한 논의를 전개했다.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국민취업지

원제도와 실질적 실업부조’, ‘상병수당·유급병가 및 휴가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간담회(11월 9일)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산재보험법상의 특고 직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노무제공자’ 개념을 제도에 적극 도입하여 적용 대상을 비정규직과 특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안정노동자에게 건강권 관련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2021년에는 6개 의제 중 나머지 4개 의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상반기에 진행할 3주제와 4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노동인권 개선, 근로감독 강화 및 조직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영역으로 확장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slc**

담당 손영우 전문위원

지역사회적대화연구회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논의 위원회 설치 건의 검토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및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사회적 대화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 노·사가 주도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논의를 시작했다. 총 14차 회의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역 산업정책,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역 사회 연대기금, 지자체 노동정책 수립 현황,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와 노사참여, 지역 일자리 사업 및 거버넌스 역할, 지역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검토 등 지역 사회적 대화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정·지역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회는 논의를 통해

지역 사회적 대화는 지역 노·사가 주도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담당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대화 주체들이 자활력을 갖기 위해 중앙 노·사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확인

”



연구회 논의 과정에 고용노동부의 노사협력정책과, 직업능력정책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노사발전재단, 지방고용노동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자체 노동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관련 기관에서 참여했고, 연구기관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연구원 등의 연구자들이 발표하기도 했다. 노·사 단체에서도 노총 지역본부와 지역지부에서, 지역상의회와 지역경총에서 함께했다.

연구회는 논의를 통해 지역 사회적 대화는 지역 노·사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에서 주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에서 대화 주체들이 자활력을 갖기 위해 중앙 노·사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첫째, 지역에서 전문 교육, 직무 안정성, 재원 마련 등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방안,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중앙-광역-기초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 셋째, 중장기적으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준비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현 과정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21년 초,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 주체들에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위원회 설치 건의를 준비 중이다. **ESIC**

담당 손영우 전문위원

# 2020년 「사회적대화 Brief」를 마감하며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더 우울한 것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입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 시작으로 희망이 보이는 가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과 숨바꼭질하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의 재 유행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 긴급 의제로 올라, 3월 5일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선언을 선제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7월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고, 경제의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노사와 정부가 한뜻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종 합의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보건 의료업종에서 합의가 나왔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사회적대화 Brief」가  
국민들에게 위원회를 전달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

한편, 올해는 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 외에도 그간 논의해왔던 많은 의제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발족 이후 줄곧 '격차해소와 일자리 창출', '디지털 시대와 노동의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합리적인 노동법 제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을 이뤄 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업종별 대화도 이전 정부와 다르게 붓물을 이뤘습니다. 해운, 보건, 버스, 공공부문 등의 업종별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의제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논의를 지속한 노력이 올해 하나둘 빛을 보게된 것 같습니다. 의제별위원회에서는 '과로사 방지대책', '근로자대표제 개선방안',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확대방안' 등에 합의를 이뤘고, 업종별위원회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임금제도 개편방안' 등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올 해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성과는 계층별위원회가 첫발을 뗐다는 점입니다. 계층별위원회는 잘 대변되지 못했던 계층도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 발족 이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새로운 대화 '틀'입니다. 올해 8월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11월 소상공인위원회까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창간한 「사회적대화 Brief」가 올해 한해 마지막 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씬 없이 달려왔지만 사회적 대화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아직도 많기에 「사회적대화 Brief」는 2021년에도 열심히 달리고자 합니다. 「사회적대화 Brief」가 국민들에게 '사회적 대화 배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sic**

이세종 국내홍보 전문위원

